

발 간 사

수도권 2,300만의 식수원으로 이용되는 팔당상수원의 안정적 공급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팔당상류지역에 각종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등을 위해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자하였음에도 상수원 수질은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팔당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그리고 상류지역만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는 공감대 형성으로 지난 1999년 한강수계의 5개 시·도가 한강수계 수질보전 및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비용분담방안을 도출하고자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이것이 “한강법(1999년)”에서 수질개선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의 기초가 되었다. 즉,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및 각종 규제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보상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제도시행 초기의 의도와는 달리 제도운영과 세부사업 추진 그리고 관리방식은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더구나 제도시행 10년이 경과되면서 관리대상 오염원의 변화, 지역 특성에 적합한 관리방식의 변화, 수질오염총량관리의 의무제 전환 등의 물관리 여건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에 5개 시·도 연구원에서는 지난 4월 연구협약을 체결하고 물이용부담금제도와 관련된 문제와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상하류 간의 협력 체제를 기반으로 한강유역을 관리·지원하는 물이용부담금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공동연구를 추진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10여 차례에 걸친 워크숍, 자문회의, 시·도 관계자 토론회 등으로 상·하류지역의 이견해소를 위해 노력해준 5개 시·도 연구진에 감사드린다. 또한, 자문회의, 토론회 및 원고 등을 통해 귀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외부 전문가, 시·도 관계자 모두에 감사를 드린다.

2009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정 문 건

인천발전연구원장
어 윤 덕

경기개발연구원장
좌 승 희

강원발전연구원장
김 정 호

충북개발연구원장
박 철 용